

기업 및 일자리 생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2025. 12.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작성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보도할 경우,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작성자 : 기획조사팀 박현준 과장, 이솔빈 조사역

조언자 : 김경근 기획조사팀장



목 차

[요약]

I. 검토 배경	1
II. 기업 및 일자리 생명의 주요 특징	2
① 분석자료 소개 및 기초통계량	2
② 주요 특징	4
III. 기업 및 일자리 생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10
① 중위임금·인구에 대한 분석결과	10
② 생산·소비·수출에 대한 분석결과	14
V. 시사점	16

< 참고 >

참고 1: 역동성과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참고 2: 권역별 산업단지 발달 양상

[요약]

① **[검토배경]** 최근 지역경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과 지역 간 성장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약화는 기업과 일자리 생멸 등 경제 역동성 부족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본고에서는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 및 일자리 생멸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② **[기업 및 일자리의 주요 특징]** ①기업·일자리 생멸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②지역 간 임금격차 심화와 ③인구 감소 등 지역경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업의 진입과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경제의 활력이 둔화된 모습이다. 반대로 수도권은 기업의 진입·집적과 일자리 창출,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져 비수도권과의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③ **[분석결과]** 기업 및 일자리 생멸 증가는 지역의 실질중위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기업·일자리 증가로 역내 노동수요가 확대되면서 실질중위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 생멸 증가는 인구수 확대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중장기적(1~3년)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동 생멸 증가로 지역의 거주 매력도(고용기회 확대, 경제 활성화 등)가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이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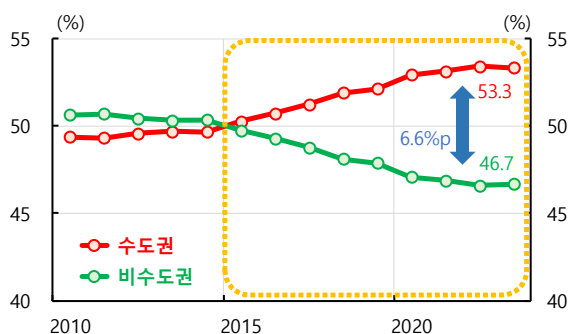
한편 신규 기업·일자리 비중의 확대는 지역의 생산과 수출을 증가시켰다. 이는 동 비중의 확대가 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소멸 기업·일자리 비중의 증가는 지역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및 일자리 소멸이 노동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④ **[시사점]**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①성장도시 중심의 선순환 산업생태계와 ②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전망 연계 정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메가 샌드박스 도입이나 사업전환제도 등을 통해 창업-성장-퇴출-재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 지역의 임금 상승과 함께 인구수·생산·소비·수출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지역형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전망 연계 정책을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진입과 투자를 촉진하는 가운데 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 정책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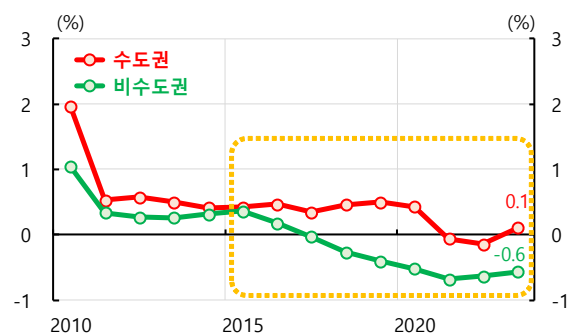
1. 최근 지역경제는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과 지역 간 성장격차 확대 등에 직면해 있다.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산업의 유입 혹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과 고용이 정체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수도권과 경제규모 격차 확대와 인구유출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 약화는 기업과 일자리 생멸 등 경제 역동성(dynamism) 부족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제 역동성이란 기업과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 속도,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 등 한 경제 내에서 자원의 재배분과 구조적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정도²⁾를 의미한다. Schumpeter(1934)는 경제 역동성(창조적 파괴)이 높은 경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³⁾를 만들 수 있으며, 반대로 동 역동성이 낮은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이 부족⁴⁾하기 때문에 인구유출 등 지방소멸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⁵⁾.
3. 본고는 경제 역동성의 한 지표인 기업 및 일자리 생멸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지역별로 기업 및 일자리의 특징을 점검하고, 동 요인과 지역경제(중위임금·생산 등) 간 관계에 대해 실증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시차·지역별 분석을 추가하여 동 관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그림 1]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GRDP 비중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증가율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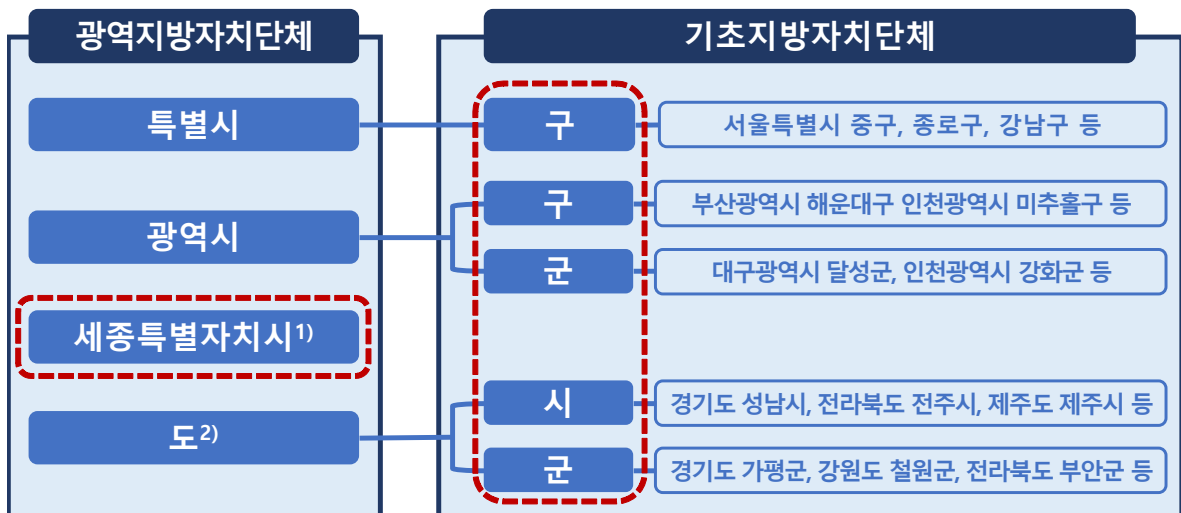
- 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GRDP 비중 격차가 2015년부터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도 비수도권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2) 한 경제 내에 고부가가치(정보통신업 등) 산업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거나 기업 및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이 빈번할 경우 역동적인 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 3)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 쇠퇴하거나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해고된 인력과 잉여 자본이 발생된다. 이러한 잉여 생산요소가 신성장산업이나 고생산성 기업으로 이전된다면, 자본 및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증가되면서 전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
- 4) Decker et al.(2014)도 2000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 역동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창출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5)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공업 도시로 발달한 디트로이트 등은 1990년대 이후 동 산업이 불황을 겪었으며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여 도시가 점차 쇠퇴되었다.

II. 기업 및 일자리 생멸의 주요 특징

① 분석자료 소개 및 기초통계량

4. 본 연구는 기업·일자리 생멸과 지역경제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18.1월~2024.12월까지의 국민연금 빅데이터⁶⁾와 지역통계⁷⁾를 사용하여 월별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구축하였다⁸⁾. 이때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 산하 행정구역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며 본고에서는 총 229개 시·군·구⁹⁾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그림 3] 참조). 예를 들어 ① 서울특별시는 중구, 종로구, 강남구 등 25개의 구로 구성되며, ②광역시의 경우 구와 군(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③일반 도(특별자치도 포함)는 시와 군(예: 경기도 성남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기초지자체 산하의 행정구(예: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 수원시 팔달구 등)는 시 수준에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 체계도



주 : 1) 세종시는 산하에 시·군·구가 없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임(1읍·9면·14행정동으로 구성)
2)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 포함

6) 국민연금 가입자 통계는 ① 전국 사업장과 국민연금 가입자(18~60세의 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는 의무가입)에 대한 전수 행정자료로서 객관성과 대표성이 우수하고 ② 가입 이력, 소득, 사업장 주소, 가입자 거주지 등 세부 정보가 익월 말에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어 속보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닌다.
7)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로부터 각 시·군·구의 월별·연령별·성별 인구수 등을 집계하여 사용하였다.
8)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빅데이터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 산업단지현황」 통계를 시·군·구 단위로 결합하여 균형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9)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의 228개 시·군·구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산하에 시·군·구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지자체이지만 인구사회학적 규모를 고려하여 시(市)의 일종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5. 시·군·구 단위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 시·도 단위 분석에 비해 세분화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12월 시 지역의 평균 인구는 33.1만명, 구 지역의 평균 인구는 30.7만명에 달하지만 군 지역의 경우 5.1만명에 불과하다. 또한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시·구 지역과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군 지역 간에는 산업구조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시·도 내에서도 개별 시·군·구마다 기반 산업이 상이할 수 있다¹⁰⁾. 따라서 시·군·구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6. 경제 역동성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¹¹⁾들은 시·도 수준의 연간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대부분이며 시·군·구 수준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229개 시·군·구에 대한 월별 패널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비해 기업 및 일자리 생멸과 지역경제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동학(dynamics)을 풍부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고의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기초 통계량				자료 출처
	Mean	Std.Dev.	Min	Max	
중위임금 ¹⁾ (단위: 원)	2,430,563	434,310	1,519,480	4,530,422	국민연금공단
인구수(단위: 명)	225,441	222,030	8,866	1,203,285	행정안전부
기업생멸수 ²⁾ (단위: 개)	346	317	11	3,428	국민연금공단
신규기업수(단위: 개)	187	179	0	2,296	국민연금공단
소멸기업수(단위: 개)	160	149	2	1,446	국민연금공단
일자리생멸수 ¹⁾ (단위: 개)	3,438	5,097	20	60,608	국민연금공단
신규일자리수(단위: 개)	1,814	2,691	8	38,499	국민연금공단
소멸일자리수(단위: 개)	1,624	2,432	6	29,482	국민연금공단
제조업일자리수(단위: 개)	13,947	23,400	35	171,987	국민연금공단
정보통신업일자리수(단위: 개)	2,734	9,667	1	117,760	국민연금공단
도소매·숙박업일자리수(단위: 개)	11,017	18,575	106	196,128	국민연금공단
청년(20~39세) 인구수(단위: 명)	58,699	64,212	1561	381,869	행정안전부
고령(65세 이상)인구수(단위: 명)	38,040	29,478	2240	192,030	행정안전부
성비 ³⁾ (단위: %)	50.1	1.4	46.6	57.2	행정안전부
산업단지수 ⁴⁾ (단위: 개)	5.6	6.5	0.0	37.0	한국산업단지공단

관측치(시·군·구) 수(n) = 229개 / 시점(월) 수(t) = 84개

1) 시도별·월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임금으로 환산

2) 당월 신규 및 소멸 기업 수 혹은 일자리 수를 합산

3) 성비 = (남성 수 / 총 인구 수) × 100을 의미

4) 당월에 시·군·구에 존재하는 국가도시첨단·일반·농공 산업단지 수를 합산

10) 예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육·행정·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시와 제조업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군산시는 임금 수준이나 산업 비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점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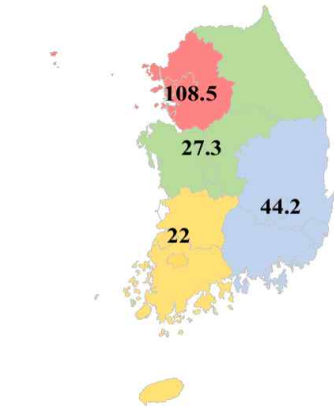
11)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1>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주요 특징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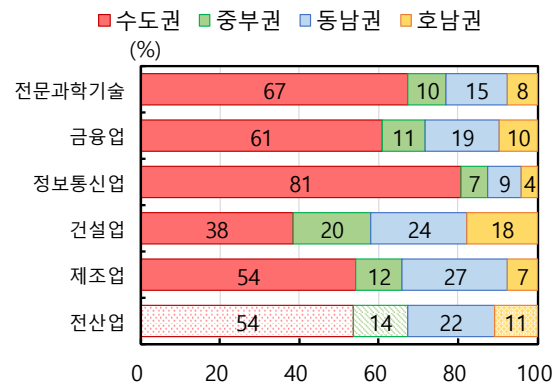
7. 기업들의 지리적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2월 기준 수도권의 기업수는 108.5만개로 비수도권 전체 기업수(93.5만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정보통신업의 81%,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67%가 각각 수도권에 밀집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집중된 모습이다.

[그림 4] 권역별 기업수(만개)¹⁾



주: 1) 2024.12월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그림 5] 산업·지역별 기업 분포¹⁾



주: 1) 2024.12월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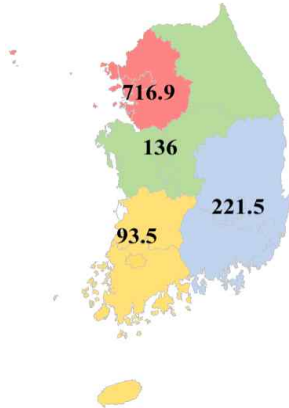
8. 일자리¹²⁾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2월 기준 716.9만개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는 비수도권 일자리(451만개)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기업 밀도도 높고 교통·생활 인프라 등 기반시설이 잘 확충되어 있어 기업과 인구의 집적이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¹³⁾. 특히 기업당 일자리 수도 수도권(6.5개, 2024년 기준)이 비수도권(4.6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별 기업의 규모도 수도권이 비교적 큰 경향을 보였다¹⁴⁾.

12) 일자리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수(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포함)로 정의되며 소득이 있더라도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학 강사나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13) 정민수 외(2023)는 수도권으로 인구와 기업이 집중되면서 지식의 파급효과(spillover), 노동시장의 매칭 효율성 개선 등 집적의 이익(agglomeration effect)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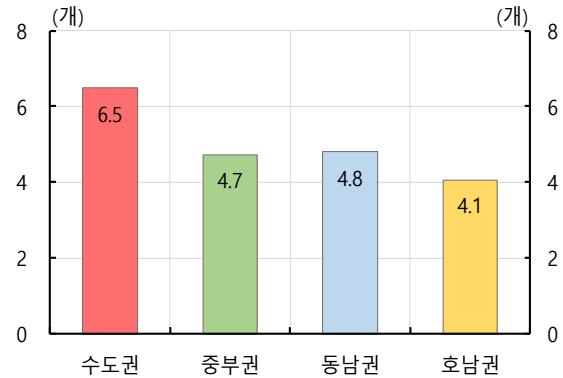
14) 국내 500대 기업 본사의 77%가 수도권에 밀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CEO스코어, 2025.6월).

[그림 6] 권역별 일자리수(만개)



주: 1) 2024.12월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그림 7] 권역별 기업당 일자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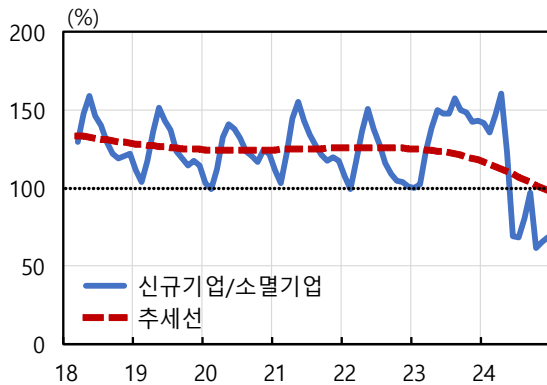


주: 1) 2024년 기준
자료: 국민연금공단

기업·일자리, 임금의 지역 간 격차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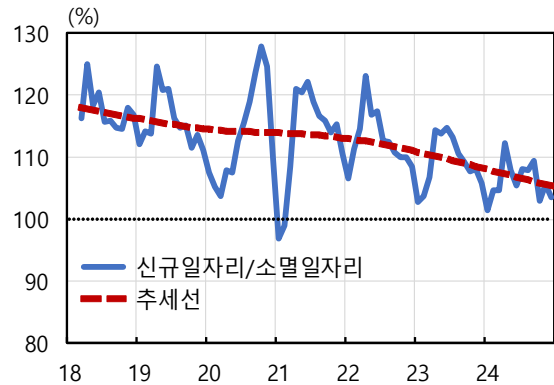
9. 소멸 대비 신규 기업 비율은 2024.5월 이후 소멸 기업수의 증가로 인해 100%를 하회하는 모습이다¹⁵⁾. 한편 소멸 대비 신규 일자리수 비율은 대체로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그 감소세가 가팔라졌다. 이는 과거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동 추세는 높은 물가 및 인건비, 자동화 시스템 확산, 산업구조 변화¹⁶⁾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 소멸기업 대비 신규기업 비율



주: 1) 전체 시·군·구 평균, 3개월 이동평균
2) 추세선은 HP필터로 추출
자료: 국민연금 빅데이터

[그림 9] 소멸일자리수 대비 신규일자리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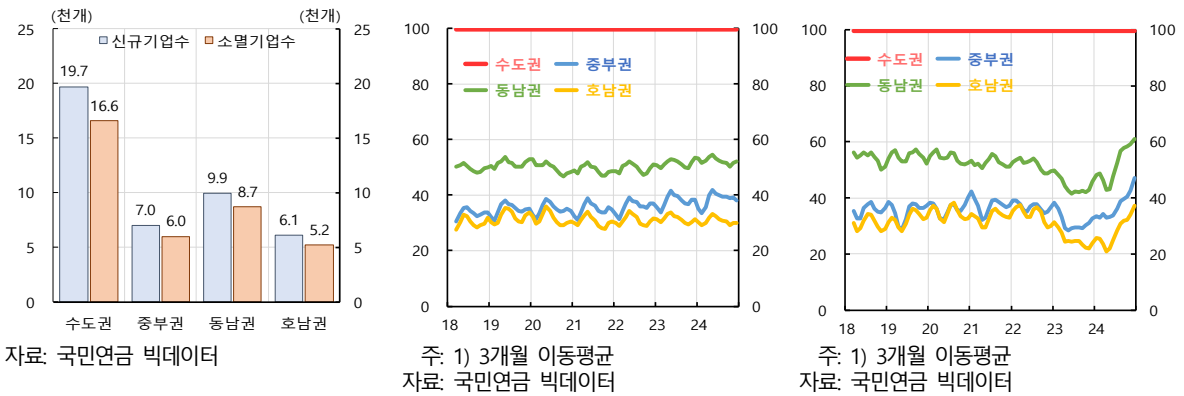


주: 1) 전체 시·군·구 평균, 3개월 이동평균
2) 추세선은 HP필터로 추출
자료: 국민연금 빅데이터

15)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소멸기업대비 신규기업 비율은 74.7로 나타났다. 즉, 100개의 기업이 소멸되더라도 약 75개 기업만이 신규로 진입하는 셈이다.
16)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이나 인공지능(AI)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에 비해 첨단기술·자본집약적이고 다수보다는 소수의 고숙련 노동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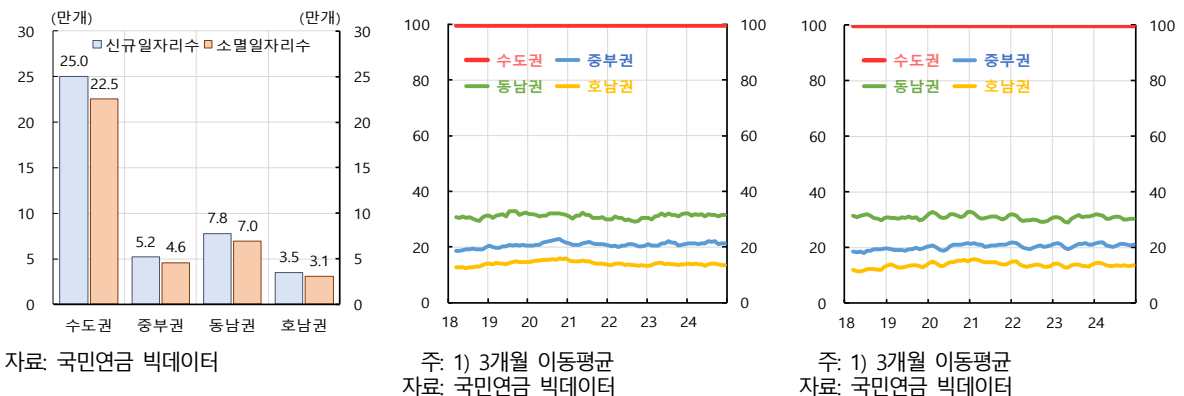
10. 신규 기업수(월평균)는 수도권(19.7천개), 동남권(9.9천개), 중부권(7.0천개), 호남권(6.1천개)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멸 기업 수도 수도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된 동남권이 산업 인프라가 열악한 호남권에 비해 기업들의 생멸이 더 활발하였다¹⁷⁾. 또한 기업 생멸 추이를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소멸 기업 수가 2024년 들어 수도권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림 10] 월평균 신규·소멸기업수 [그림 11] 권역별 신규기업수¹⁾ (수도권=100) [그림 12] 권역별 소멸기업수¹⁾ (수도권=100)



11. 일자리 생멸도 수도권에서 더욱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신규 일자리(월평균 41.5만개)의 약 60%가 수도권(25.0만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멸 일자리수도 수도권이 22.5만개로 여타 3개 권역(14.7만개)의 1.5배를 상회하였다. 한편 일자리 생멸의 월별 추이는 신규 및 소멸 일자리 모두 비수도권 3개 권역에서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 월평균 신규·소멸일자리수 [그림 14] 권역별 신규일자리수¹⁾ (수도권=100) [그림 15] 권역별 소멸일자리수¹⁾ (수도권=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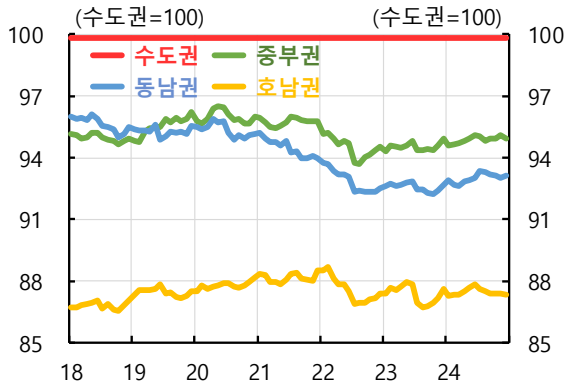


17) 2024년말 기준 동남권에는 472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호남권(227개)의 2배를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권역별 산업단지 분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12. 비수도권의 실질중위임금은 수도권에 비해 약 7~8% 가량 낮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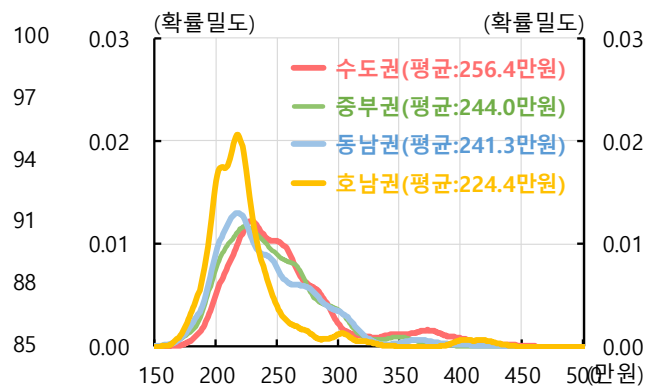
이는 수도권에 고임금 산업(예: 금융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호남권은 실질중위임금이 224.4만원으로 수도권(평균 256.4만원) 대비 32만원 가량 낮았으며 임금의 분포도 200~250만원 구간에 밀집된 모습이다¹⁸⁾.

[그림 16] 권역별 실질중위임금¹⁾ 추이



주: 1) 시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
자료: 국민연금 빅데이터

[그림 17] 권역별 실질중위임금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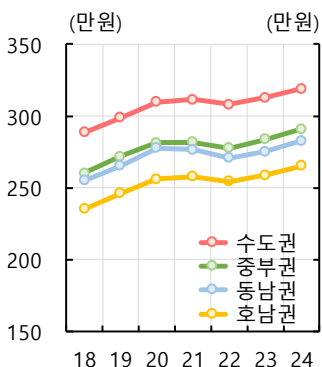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 빅데이터

13. 동종산업 내에서도 권역마다 임금 격차가 뚜렷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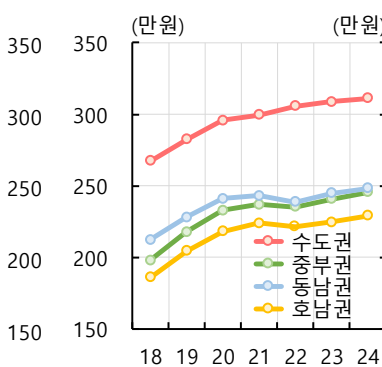
산업 내에서도 수도권에는 고부가가치 산업 발달과 기업들의 집적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임금이 높은 경향이 있다(Behrens et al., 2014; Fafchamps and Hamine, 2017). 이로 인해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지역별로 실질중위임금의 차이가 나타난 반면 농림어업 등 산업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¹⁹⁾.

[그림 18] 제조업 중위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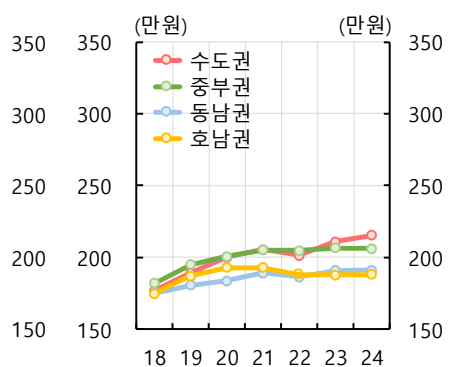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 빅데이터

[그림 19] 건설업 중위임금 추이



자료: 국민연금 빅데이터

[그림 20] 농림어업 중위임금 추이



자료: 국민연금 빅데이터

18) 최빈값(mode)으로 살펴보면 수도권(229만원), 중부권(224만원), 동남권과 호남권(217만원) 순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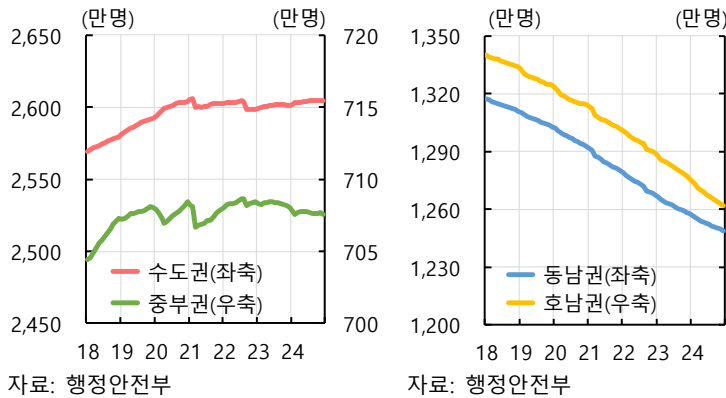
19) 농림어업, 예술·스포츠산업 등은 공간적·지리적 제약을 많이 받거나 집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권역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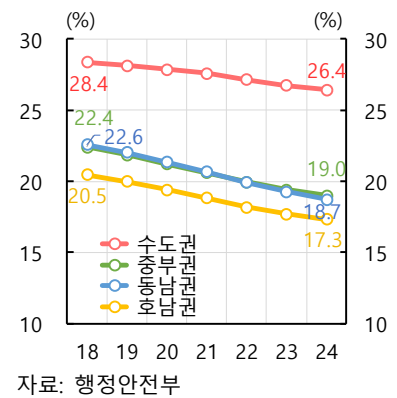
14. 수도권·중부권과 달리 동남권과 호남권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수도권과 중부권의 인구수는 2020년 무렵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1년 이후 정체된 반면, 동남권·호남권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감소세가 꾸준히 지속되었다. 수도권의 경우 교통·문화·생활 인프라가 잘 확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첨단지식산업 등이 집적되어 있어 청년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²⁰⁾. 저출산·고령화로 청년인구 비중은 모든 권역에서 해마다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의 감소세는 여타 권역에 비해 완만하게 나타났다²¹⁾.

[그림 21] 권역별 인구추이



[그림 22] 권역별 청년인구 비중



15. 비수도권의 다수 지역에서 인구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성장도시에서는 인구 증가 현상(순유입)이 관찰되었다. 성장도시들은 기업의 집적과 일자리 확대²²⁾,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제도적 지원²³⁾(혁신도시 건설 등), 인근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의 생활인프라(주거·교육·의료·문화) 등에 힘입어 여타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20) 정민수 외(2023)는 2015~2021년중 수도권 인구 증가에 대한 청년층 유입의 기여율이 78.5%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21) 2018년 대비 2024년의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폭은 수도권(△1.9%p), 호남권(△3.2%p), 중부권(△3.4%p), 동남권(△3.8%p)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22)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삼성전자, 기아차 공장 등 역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로부터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다 동탄신도시 등의 발달에 힘입어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2010년 50.6만명 → 2024년 96.9만명).
 23) 예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경우 주요 산업단지가 집적되어 있고(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등), 전북혁신도시 지정(완주군 이서면)과 공공기관 이전, 지자체의 정착지원정책(예: 전입지원금, 결혼축하금) 등에 힘입어 인구가 증가하였다.

[표 2] 권역별 주요 인구순유입 시·군·구

권역	대표 시·군·구	인구(만명)		증감(만명)	주요유입 요인
		2010년	2024년		
수도권	경기 화성	50.6	96.9	46.3	주요 대기업(삼성전자, 기아차공장 등)집적, 신도시(동탄)발달
	인천 서구	40.8	63.4	22.6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중부권	충남 천안	55.8	66.0	10.2	산업단지 및 서비스업 분야 근로자 증가, 도시개발사업(신도시 개발) 등
	충남 아산	26.5	35.5	9.0	주요 대기업의 생산거점(삼성디스플레이, 현대차 등), 산업단지 발달에 따른 일자리 확대
	강원 원주	31.5	36.2	4.7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원주기업도시 발달에 따른 민간투자 확대
동남권	경북 양산	26.0	36.0	9.9	신도시(사송)개발에 따른 인근 인구 유입, 외국인 근로자 증가
호남권	전북 완주	8.5	9.9	1.4	산업단지(봉동테크노밸리) 및 전북혁신도시(이서면)발달
	전남 광양	14.6	15.5	0.9	기업(포스코, 한화등) 유치 및 일자리 확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근(여수순천) 인구 유입

자료: 행정안전부

소 결

16.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일자리 생멸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역 간 임금격차 심화와 인구 감소 등 지역경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업의 진입과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지 않아 지역경제의 활력이 둔화된 모습이다. 반대로 수도권은 기업의 진입·집적과 일자리 창출,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져 비수도권과의 경제규모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일자리 생멸과 지역경제 간 관계를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III. 기업 및 일자리 생멸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1️⃣ 중위임금 · 인구에 대한 분석결과

17. 기업 및 일자리 생멸의 증가는 실질 중위임금(지역경제 수준 대응)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업 및 일자리 생멸 1% 증가는 중위임금을 각각 0.02%, 0.03%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기업 및 일자리 생멸을 하위수준(신규·소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도 중위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규 기업·일자리가 증가하면 중위임금을 상승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내 노동 수요가 확대되면서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소멸은 주로 저생산성(저임금)의 기업·일자리에서 발생²⁵⁾하기 때문에 전체 임금분포가 상향 이동되었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업·일자리 근로자들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직하면서 중위임금이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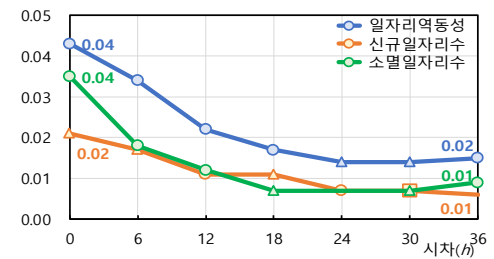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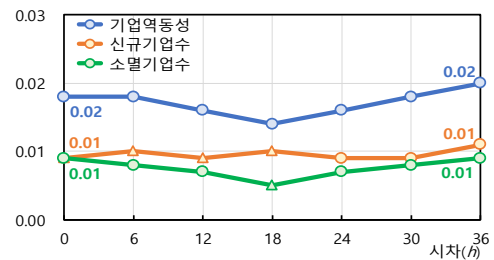
18. 동 생멸의 증가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중위임금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임금에 미친 기업 생멸의 긍정적 효과는 36개월 후까지 지속되었으나, 일자리 생멸의 긍정적 효과는 점진적으로 감소되었다. 창조적 파괴 이론에 따르면, 신규 기업·일자리는 지역경제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며 임금 상승을 유발한다. 한편 동 소멸은 경쟁력이 낮은 집단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금분포를 상향 이동시킨다. 이러한 창조적 파괴 과정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자원(노동·자본)이 재배분되는 효과를 유발하며,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표 3] 중위임금과 기업·일자리 생멸간 관계 분석¹⁾²⁾³⁾

종속변수: ln(중위임금)	(1)	(2)	(3)	(4)	(5)	(6)
▪ ln(기업생멸수)	0.02*** (0.01)					
▪ ln(신규기업수)		0.01** (0.00)				
▪ ln(소멸기업수)			0.01*** (0.00)			
▪ ln(일자리생멸수)				0.03*** (0.01)		
▪ ln(신규일자리수)					0.02*** (0.01)	
▪ ln(소멸일자리수)						0.03*** (0.00)
통제변수	YES	YES	YES	YES	YES	YES
개체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시간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결정계수(R ²)	0.80	0.80	0.80	0.81	0.81	0.81
사·군·구(ID) 수	229(n) × 82(t)					

주: 1) () 내는 클러스터 표준오차
2) 각 독립변수는 3개월 말항 이동평균하여 불규칙 요인을 제거
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그림 23] 시차별 효과



주: 1) 그림의 표식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표식이 없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저자 추정

24) 예를 들어 특정 시·군·구의 신규·소멸 기업수(합산)가 전월 100개이었다가 금월 110개가 된 경우, 금월 중위임금이 4,860원(평균 중위임금 2,430,563원 기준) 정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5) McKinsey Global Institute(2017)에 따르면 건설업은 다른 산업 대비 생산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는데, 2024년 소멸기업 중 건설업이 71.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정보통신업(1.7%), 금융업(0.5%)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9. 한편 기업 및 일자리 생멸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인구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수에 대한 기업 및 일자리 생멸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하위수준(신규·소멸)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특정 지역에 기업이 진입하거나 일자리가 생성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지역으로 당장 거주지를 이동하는 데는 상당한 이동비용²⁶⁾이 수반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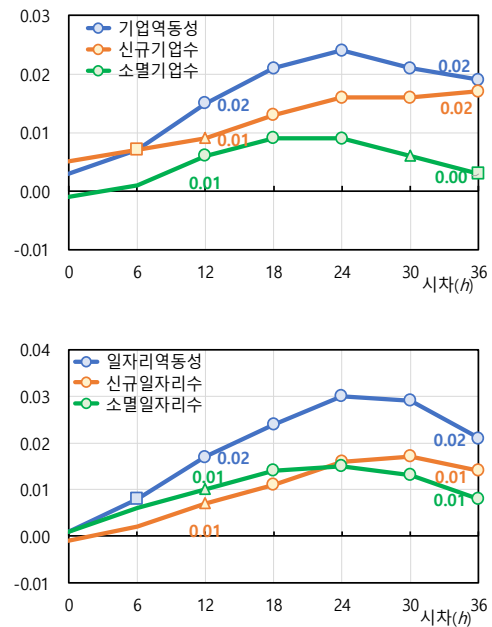
20.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동 생멸의 증가는 인구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일자리 생멸 1% 증가는 12개월 이후 인구수를 각각 0.02%씩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이후 36개월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기업 및 일자리 생멸 증가로 지역의 거주 매력도(고용기회 확대, 경제 활성화 등)가 높아지면 서 중장기적으로 근로자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²⁷⁾.

[표 4] 인구와 기업·일자리 생멸 간 관계 분석결과(12개월 후)¹⁾²⁾³⁾

종속변수: ln(인구수 _{t+12})	(1)	(2)	(3)	(4)	(5)	(6)
▪ ln(기업생멸수)	0.02*** (0.01)					
▪ ln(신규기업수)		0.01** (0.00)				
▪ ln(소멸기업수)			0.01*** (0.00)			
▪ ln(일자리생멸수)				0.02*** (0.01)		
▪ ln(신규일자리수)					0.01*** (0.00)	
▪ ln(소멸일자리수)						0.01*** (0.00)
통제변수	YES	YES	YES	YES	YES	YES
개체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시간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결정계수(R ²)	0.75	0.75	0.75	0.75	0.75	0.75
사·군·구(ID) 수			229(n) × 70(t)			

주: 1) () 내는 클러스터 표준오차
 2) 각 독립변수는 3개월 말항 이동평균하여 불규칙 요인을 제거
 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그림 24] 시차별 효과



주: 1) 그림의 표식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표식이 없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저자 추정

26) Greenwood(1997)는 노동자의 지역 이동에는 금전적(이사·정보탐색 비용 등), 사회적(가족·교육 등) 제약이 존재하며, 특히 이동비용이 단기적으로 노동자의 이동을 억제한다고 주장하였다.

27) 한편 신규 뿐만 아니라 소멸 기업·일자리수 증가에도 인구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역동적 환경으로 인해 일자리가 재창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Brown and Lambert(2024)는 지역의 역동적 경영환경(지식·기술 등)이 창업과 폐업을 동시에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업이 많이 소멸되는 지역일수록 신규 진입도 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1. 기업 생멸 증가가 중위임금에 미친 효과는 권역별²⁸⁾로 이질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생멸의 증가는 수도권과 중부권에서는 중위임금을 상승시켰으나, 동남권 및 호남권의 중위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권의 중위임금 상승효과는 대체로 신규 기업이 기여²⁹⁾하였는데, 고임금의 혁신기업이 인프라가 풍부한 동 지역에 주로 진입했기 때문일 수 있다. 반대로 동남권과 호남권에서는 혁신기업보다는 저임금 산업(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의 기업이 주로 진입하면서 중위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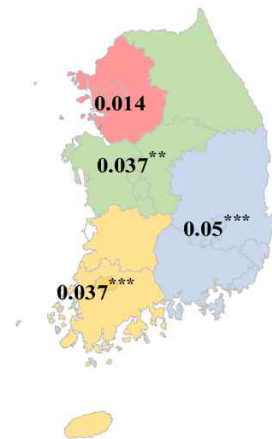
22. 다만 일자리 생멸 증가의 효과는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 일자리 생멸 1% 증가는 권역별 중위임금을 0.05%(동남권), 0.04%(중부권·호남권)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체적으로 임금 수준이 수도권보다 낮은 편이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³⁰⁾가 생성되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던 중위임금을 더욱 상승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중위임금에 대한 일자리 소멸 증가의 효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그림 25] 중위임금에 대한 기업 생멸의 효과¹⁾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추정

[그림 26] 중위임금에 대한 일자리 생멸의 효과¹⁾



주: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 추정

28) 지역은 권역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권(대전·세종·충청·강원), 동남권(부산·울산·대구·경상), 호남권(광주·전라·제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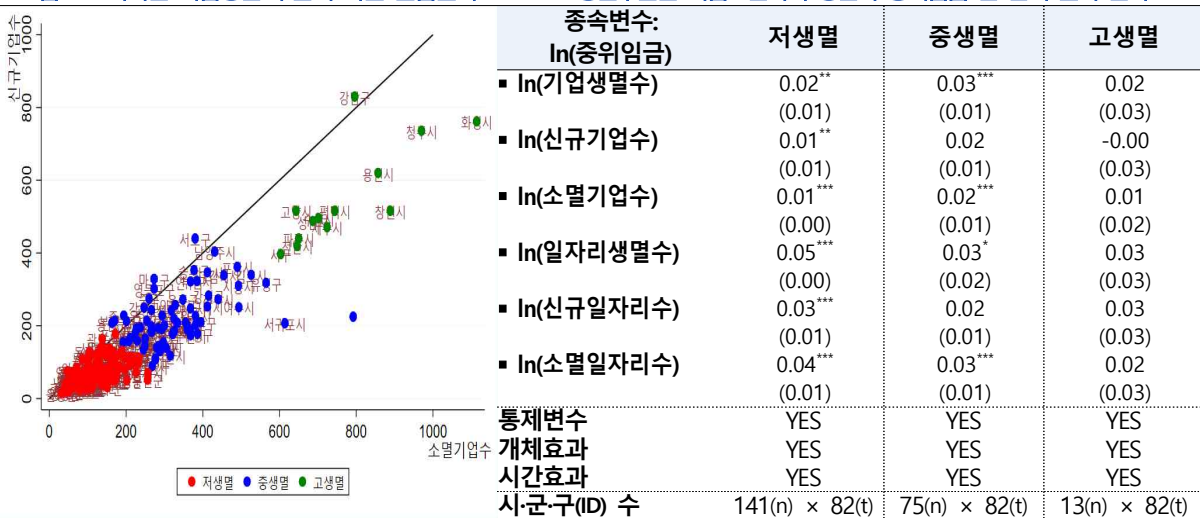
29) 기업과 일자리 생멸을 신규·소멸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종속변수: ln(중위임금)				종속변수: ln(중위임금)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호남권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호남권	
■ ln(신규 기업수)	0.03**	0.01*	0.01	-0.01	■ ln(신규 일자리수)	0.01	0.02*	0.03**	0.03**
■ ln(소멸 기업수)	0.01	0.00	0.01	0.00	■ ln(소멸 일자리수)	0.02**	0.03***	0.04***	0.03***

30) Foster et al(2001)에 따르면 시장의 진입하려는 신규 기업(일자리)은 기존 기업 대비 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23. 생멸 수준(저·중·고)별³¹⁾ 분석 결과, 저생멸 지역은 기업·일자리의 생성과 소멸 모두 중위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생멸 지역과 다르게 저생멸 지역은 중위임금에 대한 신규 기업 및 일자리의 긍정적 효과가 모두 관찰되었는데, 이는 신규 기업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신규 기업수가 2개인 지역에서 다음 달 5개가 된 경우, 신규 기업수가 150% 증가하면서 중위임금을 크게 상승시켰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생멸 지역은 저생산성·저임금 기업 및 일자리가 다수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 대비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중위임금을 상향시켰을 가능성도 공존한다. 한편 중생멸 지역에서는 기업 및 일자리 소멸만이 중위임금에 영향을 미쳤으며, 고생멸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림 27] 지역별 기업생멸 수준에 따른 군집분석 [표 5] 생멸수준별 기업·일자리 생멸과 중위임금 간 관계 분석 결과¹⁾²⁾³⁾⁴⁾



자료: 저자 시산

주: 1) () 내는 클러스터 표준오차
 2) 각 독립변수는 3개월 말항 이동평균하여 불규칙 요인을 제거
 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4) 각 셀은 독립된 방정식을 의미

31) 본 분석에서는 Ward's linkage 방법을 활용하여 생멸 수준에 따라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동 방법은 집단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비슷한 관측치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생산·소비·수출에 대한 분석결과

24. 지역 내 신규 기업 비중의 증가는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규 기업 비중 변화분(전년동월대비)이 1%p(약 1,100여개) 증가하면 광공업생산지수 변화율이 2.71%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기업의 진입은 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향상³²⁾시키기 때문에, 지역 내 동 비중이 상승할수록 생산량 변화율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멸 기업 비중 변화분의 증가는 지역 내 생산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5. 신규 일자리 비중의 증가는 신규 기업 대비 생산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일자리 비중 변화분이 1%p(약 6,700여개) 증가하면 광공업생산지수 변화율이 3.3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Y)은 생산성(A)·자본(K)·노동(L)으로 구성되는데, 신규 일자리 비중의 상승은 노동(L)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총생산량 변화분을 더욱 확대(신규 기업 대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³³⁾.

[표 6] 기업 및 일자리 생멸이 지역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¹⁾²⁾³⁾

종속변수	△광공업생산지수(전년동월대비(yoy))					
	(1)	(2)	(3)	(4)	(5)	(6)
▪ △생멸기업 비중(yoy)	0.80 (0.58)					
▪ △신규기업 비중(yoy)		2.71** (0.85)				
▪ △소멸기업 비중(yoy)			0.44 (0.87)			
▪ △생멸일자리 비중(yoy)				1.48* (0.77)		
▪ △신규일자리 비중(yoy)					3.35*** (1.05)	
▪ △소멸일자리 비중(yoy)						-0.65 (1.14)
통제변수	YES	YES	YES	YES	YES	YES
개체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결정계수(R2)	0.05	0.05	0.04	0.05	0.06	0.04
시도(ID) 수	17(n) × 70(t)					

주: 1) () 내는 강건한 표준오차
 2) 각 독립변수는 3개월 말항 이동평균하여 불규칙 요인을 제거
 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시산

32) 이병기(2014)는 2002~2011년간 순기업진입률(진입률-퇴출률) 상승이 생산성 향상에 평균 13%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Fritsch and Changoluisa(2017)는 신규 기업의 진입은 산업내 경쟁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33) 과거 대비 고부가가치(IT·반도체 등) 산업에서 신규일자리가 많이 생성되었다면, 유효노동(A×L)을 통해 지역내 생산을 더욱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26. 지역 내 소멸 기업·일자리 비중의 증가는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멸 기업·일자리 비중 변화분의 1%p 증가는 대형소매점판매액 지수 변화율을 각각 4.01%p, 3.47%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일자리 소멸에 따른 노동자의 소득 감소가 소비 하락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규 일자리 비중 변화분의 1%p 증가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변화율을 3.52%p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규 일자리 생성이 노동자의 소득 확대에 이어지면서 소비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³⁴⁾.

27. 한편 신규 기업과 일자리 비중의 증가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기업·일자리 비중 변화분의 1%p 증가는 수출액 변화율을 각각 5.50%p, 9.75%p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두 요인이 생산(내수+수출) 보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규 수출기업이 내수기업 대비 생산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표 7] 기업 및 일자리 생멸이 지역의 소비·수출에 미치는 영향¹⁾²⁾³⁾

종속변수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yoy)						△수출액(yoy)					
	(1)	(2)	(3)	(4)	(5)	(6)	(1)	(2)	(3)	(4)	(5)	(6)
▪ △생멸기업 비중(yoy)	-2.94** (1.01)						0.57 (1.34)					
▪ △신규기업 비중(yoy)		-1.76 (1.33)						5.50* (2.68)				
▪ △소멸기업 비중(yoy)			-4.01** (1.38)						-0.73 (2.01)			
▪ △생멸일자리 비중(yoy)				0.63 (1.02)						4.27 (3.65)		
▪ △신규일자리 비중(yoy)					3.52** (1.51)						9.75* (4.73)	
▪ △소멸일자리 비중(yoy)						-3.47** (1.56)						-2.00 (3.84)
통제변수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개체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결정계수(R ²)	0.11	0.07	0.12	0.06	0.08	0.07	0.05	0.06	0.05	0.06	0.080	0.06
시도(ID) 수			17(n) × 70(t)						17(n) × 70(t)			

주: 1) () 내는 강건한 표준오차
 2) 각 독립변수는 3개월 말항 이동평균하여 불규칙 요인을 제거
 3)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저자시산

34) 반면 신규 기업은 단기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 노동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35) Melitz(2003)의 이질적 기업 무역이론에 따르면 수출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내수시장 위주의 기업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수출기업의 1인당 매출액(생산성)은 내수기업 대비 약 1.6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병기, 2017).

IV. 시사점

28. 최근 지역경제에서는 경제 역동성의 한 지표인 기업·일자리 생멸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일자리 생멸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중위임금·인구·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동 생멸이 둔화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 역동성 지표를 반영한 기업·일자리 정책의 방향 수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9.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성장도시를 중심³⁶⁾으로 한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성장-퇴출-재창업 순환 구조를 활성화 하여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임금이 상승하고 인구수·생산·소비·수출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성장을 위해서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³⁷⁾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저생산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재창업을 위해 사업전환 제도³⁸⁾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30. 아울러 지역형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전망 연계 정책을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업은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진입과 투자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반대로 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동시에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 정책³⁹⁾을 참고할 수 있다. 동 정책은 해고·채용이 자유로운 대신 노동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취업 프로그램과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앞선 지역주도의 메가 샌드박스 등과 함께 동 정책이 시행된다면 기업의 진입 및 투자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6) 지방은 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성장도시 위주로 젊은 인구가 순유입 중인 가운데 다양한 인적자원 등으로 인재채용이 비교적 용이하다.

37) 특정 경제권 단위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인력·연구개발 인프라와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규제혁신 정책을 의미한다.

38) 경영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R&D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정책이다.

39) 플렉시큐리티 정책이란 노동시장의 유연화(flexibility)와 고용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덴마크의 노동정책으로, 해고와 채용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증진하는 한편 실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소득대체율: 80%, 최대 2년)와 직업훈련·상담, 일자리 매칭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덴마크는 동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직업이동과 실업률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참고 1 역동성과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경제적 역동성(economic dynamism)은 기업의 생멸(진입과 퇴출, 성장과 축소)로 묘사될 수 있으며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및 창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⁴⁰). 즉 경제는 신규 진입기업이 촉발하는 혁신과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로 대표되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Schumpeter, 1934). 특히 기업의 창업은 고용 창출(Fritsch and Mueller, 2004; Acs et al., 2005), 시장경쟁 활성화와 자원 재배분을 통한 생산성 제고(Hsieh and Klenow, 2009), 그리고 산업의 집적과 지식확산(knowledge spillover)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Amaghous and Ibourk, 2012, Xu et al., 2021 등).

가. 해외의 실증연구

역동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주로 창업이 고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역동성은 고용과 생산성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ritsch and Mueller, 2004; Baptista and Preto, 2008; Dejardin, 2011; Audretsch and Keilbach, 2008; Holtz-Eakin and Kao, 2003 등).

대표적으로 Fritsch and Mueller(2004)는 서독의 74개 지역에 대한 패널자료에 대해 Almon의 다항시차모형을 이용해 분석⁴¹)한 결과 창업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특히 창업으로 인한 즉각적인 고용확대효과에 더하여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Baptista and Preto(2011)도 포르투갈의 지역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결론을 얻었으며 특히 지식기반 창업기업(knowledge-based start-ups)이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Holtz-Eakin and Kao(2003)은 미국의 州(state)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동태 패널분석을 통해 신생기업률 증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으며, Decker et al.(2014)도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창업활동이 감소하면서 역동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창출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경제의 역동성과 근로자의 임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Shambaugh et al.(2018)는 경제의 역동성 감소로 시장내 경쟁이 약화되면 근로자의 임금상승 기회나 더 나은 일자리의 이직기회가 감소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동성 감소가 임금상승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40) Decker et al.(2014)는 기업의 역동성을 기업의 진입(entry), 퇴출(exit) 확장(expansion), 그리고 축소(contrac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41) 여타 문헌들에서도 Almon의 다항시차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가 널리 사용되었다(Baptista et al., 2008; Baptista and Preto, 2011; 김흥기·신호철(2022), 조성철·김기호(2018), 이동주 외(2011) 등).

나. 국내의 실증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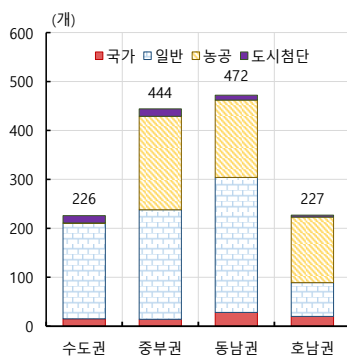
국내의 연구들도 기업의 신규창업 및 소멸이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윤재(2009)는 1995~2005년 우리나라 16개 광역 시도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과 같이 기업가의 창업활동이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정혜진(2016)은 일반적인 신생기업의 창업은 지역내총생산(GR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창업은 GR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시·군·구나 읍면동 자료를 활용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조성철, 김기호, 2018; 강지수 외, 2017 등). 조성철, 김기호(2018)는 2004~2016년 연도별 시·군·구 자료를 이용하여 창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고용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강지수 외(2017)의 경우에도 과밀창업 억제대상인 14개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읍면동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비스산업의 역동성(진입률, 퇴출률) 증가가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⁴²⁾.

참고 2 권역별 산업단지 발달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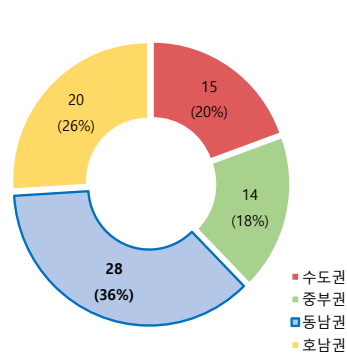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총 1,369개로 주로 중부권(444개)과 동남권(472개)에 분포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단지⁴³⁾의 경우 1/3 이상이 동남권에 밀집되어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204개)와 경상남도(212개)에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⁴⁴⁾. 호남권의 경우 새만금을 중심으로 군산에 국가산업단지(4개)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구심점 역할을 할 앵커 기업이 부족하여 여타 권역에 비해 산업단지나 일자리 및 사업체 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A1] 권역별 산업단지 개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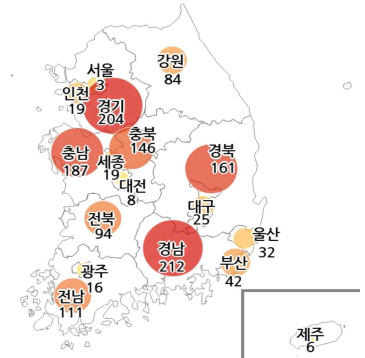
주: 1) 2024.12월 기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림 A2] 권역별 국가산업단지 개수¹⁾



주: 1) 2024.12월 기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림 A3] 시도별 산업단지 분포¹⁾



주: 1) 2024.12월 기준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42) 진입률과 퇴출률 1%p 상승시 평균적으로 노동생산성은 각각 0.2%p, 0.03%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43) 산업단지는 크게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구분되는데,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지정되는 산업단지로서 그 입지 규모도 다른 유형의 산업단지에 비해 크다. 2024.12월 기준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개수는 총 77개이다.

44)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경북 경주시(37개)가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국가산업

《참 고 문 헌》

- Acs, Z. J. and Mueller, P. (2008), "Employment Effects of Business Dynamics: Mice, Gazelles and Elephants," *Small Business Economics*, pp.85 - 100.
- Audretsch, D. B. and Keilbach, M. (2008), "Entrepreneurship, Growth and Restructuring," *Oxford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pp.281-310.
- Amaghouss, J. and Ibourk, A. (2013),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Role of Cyclical Factors -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for the Period 2001 - 2009,"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Vol.6, No.1, pp.153 - 162.
- Baptista, R. and Preto, M. T. (2011), "New Firm Formation and Employment Growth: Regional and Business Dynamics," *Small Business Economics*, pp.419 - 442.
- Baptista, R., Escária, V. and Madruga, P. (2008), "Entrepreneurship, Regional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The Case of Portugal," *Small Business Economics*, Vol.30, No.1, pp.49 - 58.
- Behrens, K., Duranton, G. and Robert-Nicoud, F. (2014), "Productive Cities: Sorting, Selection, and Agglome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22, No.3, pp.507 - 553.
- Brown, J. and Lambert, D. (2024), "Creative Destruction and the Reallocation of Capital in Rural and Urban Area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Working Paper*, No. RWP 24-11.
- Dejardin, M. (2011), "Linking Net Entry to Regional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Vol.36, pp.443 - 460.
- Decker, R., Haltiwanger, J., Jarmin, R. and Miranda, J. (2014),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in US Job Creation and Economic Dynamis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28, No.3, pp.3 - 24.
- Fafchamps, M. and El Hamine, S. (2017), "Firm Productivity, Wages, and Agglomeration Externalities," *Research in Economics*, Vol.71, No.2, pp.291 - 305.
- Fritsch, M. and Changoluisa, J. (2017), "New Business Formation and the Productivity of Manufacturing Incumbents: Effects and Mechanis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32, No.3, pp.237-259.
- Fritsch, M. and Mueller, P. (2004), "Effects of New Business Form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Over Time," *Regional Studies*, Vol.38, No.8, pp.961 - 975.
- Foster, L., Haltiwanger, J. C. and Krizan, C. J. (2001),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Lessons from Microeconomic Evidence," In *New Developments in Productivity Analy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303 - 372.

단지는 경북 구미시(7개)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 창원시(4개)와 전북 군산시(4개)가 그 뒤를 이었다.

- Greenwood, M. J. (1997), "Internal Migration in Developed Countries,"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Vol.1, pp.647 - 720.
- Holtz-Eakin, D. and Kao, C. (2003),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The Proof Is in the Productivity," *Unpublished Manuscript*.
- Hsieh, C.-T. and Klenow, P. J. (2009), "Misallocation and Manufacturing TFP in China and Indi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24, No.4, pp.1403 - 1448.
-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7), "Reinventing Construction: A Route to Higher Productivity," *McKinsey Global Institute Report*.
- Melitz, M. J. (2003), "The Impact of Trade on Intra-Industry Reallocations and Aggregate Industry Productivity," *Econometrica*, Vol.71, No.6, pp.1695 - 1725.
- Schumpeter, J. A.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mbaugh, J., Nunn, R. and Liu, P. (2018), "How Declining Dynamism Affects Wages," *The Hamilton Project, Brookings Institution*.
- Xu, B., Yu, H. and Li, L. (2021),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 Perspective of Spatial Heterogeneity,"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Vol.33, Nos.3 - 4, pp.309 - 331.
- 강지수, 전현배, 조장희 (2017), "진입퇴출과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 과밀창업 억제 대상 자영업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pp.129 - 157.
- 김흥기, 신호철 (2022), "창업이 고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경제연구』, pp.69 - 99.
- 문병기 (2017),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역량 비교 분석-우량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Trade Focus*.
- 이병기 (2014), "기업 진입·퇴출의 생산성 효과와 진입규제 개혁과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 이동주, 이윤보, 김종운 (2011), "창업이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Vol.33, No.2, pp.73 - 92.
- 이윤재 (2009), "기업가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증분석," 『중소기업연구』, Vol.31, No.2, pp.63 - 84.
- 정민수, 김의정, 이현서, 홍성주, 이동렬 (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No.2023-29.
- 정혜진 (2016), "창업활동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2007~2014)," 『GRI 연구논총』, pp.35 - 62.
- 조성철, 김기호 (2018), "창업의 장기 고용효과: 시·군·구 자료 분석," 『고용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 CEO스코어 (2025), "500대 기업 본사, 수도권에 80% 밀집... 세종·강원 고작 1곳씩," CEO스코어 보도자료, 2025.6.25.